미국 'LG페이'에 지갑 열까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올해 출시 G7과 동시 진출

18개국 사용 '삼성페이'와 경쟁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G7 출시 시점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LG페이'를 미국에 진출시킬 계획이다. LG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LG전자 홈페이지 캡처〉

LG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LG페이'가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G7과 함께 미국에 진출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G7 출시 시점부터 LG페이의 미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최근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LG페이는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오프라인에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그네틱 기술인 WMC(Wireless Magnetic Communication)를 탑재해 모바일 기기에서 마그네틱 신호를 발생시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면 결제가 된다.

작년 6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G6, V30에만 LG페이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가 장착돼 있다.

LG전자는 LG페이의 미국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브랜드 명을 LG페이가 아닌 'LG월렛'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최근 미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 서비스의 이름이 'LG월렛'으로, 아이콘은 'LG페이'로 표시된 페이지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 페이지는 노출 2시간 만에 없어졌다.

LG전자는 기존 'LG페이'라는 이름보다 'LG월렛'이라는 이름이 미국 소비자에게 더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지 브랜드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명을 포함한 마케팅 전략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출시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국내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LG페이를 이달 출시하는 보급형 K10 2018년형부터 확대하는 등 LG페이 생태계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G7, V40 등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LG페이 서비스를 알린뒤 내년부터는 미국향 중저가 실속형 제품에도 LG페이를 본격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경쟁 서비스인 삼성페이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스페인, 호주,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등 18개 시장에서 상용 서비스되고 있다. 갤럭시S와 노트시리즈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뿐 아니라 중저가 폰인 갤럭시A와 갤럭시J 시리즈 등에도 탑재돼 이용자층이 두텁다.

G7은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나 3월 자체 행사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3~4월 중 국내에 출시되고 이후 미국에 출시된다. /연합뉴스

법정 가는 애플

한국 150명 위자료 220만원씩 청구…줄소송 예고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주 시작된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소송 참여고객은 150명이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법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때문이었는지, 과실 때문이었는지 따지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 하지만 애플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회적 비난과 함께 판결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의도적으로 성능저하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뛸 수 있다.

아이폰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물질·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눈여겨 봐야 할 점이다.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을 쓰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 ·음악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애플이 이 같은 업데이트를 했을 때 아이폰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성능저하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모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일 오전 기준으로 35만2394명에 달했다. 한누리 역시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으로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누리는 구체적 소송 방식을 두고 검토중인데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르면 2월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카톡 민방위 가는 날이지 말입니다

카카오페이, 과기부 승인 땐 올 상반기 공문서 취급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민방위 통지 등의 정부·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기술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가 최종 지정한다. 현재까지 SK텔레콤과 코스콤, 더존비즈온 등 업체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됐다.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한다면 올해 1분기 안에 지정이 완료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공문서 취급을 시작할 것으로 카카오 측은 전망했다.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로 은행·증권사 등 금융업체의 대고객 창구 용도로 활용됐지만, 이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정부·공공기관으로 취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각종 국가 기관·공단의 문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필요시 인증 서비스로 주고받은 문서를 법적 증명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방위 훈련통지서와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당사자 본인만 열람·서명할 수 있는 문서도 카카오톡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 확인 및 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이미 완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가 공문서 유통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정부의 관련 규정 개정도 있다.

이전까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업체라도 정부 공인 전자우편 '샵메일(#메일)'을 통해서만 문서를 유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샵메일 뿐 아니라 이메일·모바일 메신저로도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가 공문서 유통 창구로 사실상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샵메일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국내 점유율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연합뉴스

"당장 PC·스마트폰 업데이트 하세요"

인텔 등 해킹 취약점 발견…인터넷진흥원 주의 당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텔의 CPU(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피해 사례가 국내외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방을 위해 PC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인텔, AMD, ARM 등 컴퓨터 칩 제조사의 CPU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메모리에 저장된 중요 정보를 해커에게 노출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KISA는 "현시점에서 해결 방안은 사용 중인 PC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10을 비롯한 윈도 7, 8의 보안 업데이트 패치를 배포했고, 레드햇·데비안 등 리눅스 계열 업체들도 지난 4일부터 보안 패치를 배포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도 자사 운영체제 업데이트 패치를 배포 중이다.

KISA 이동근 침해사고분석단장은 "최신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패치 예정일을 확인해 신속하게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